

## 생각할 꺼리

---

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이 지향하는 가족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기.

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될 시기에 어떤 논쟁들이 있어왔고, 주요 논쟁들의 핵심은 무엇이었나?

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망과 미래에 대해 논의해 보기

# 1.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배경

## ➔ 건강가정기본법

-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.

2004년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달체계인 ‘건강가정지원센터’ 시범사업 실시(2014년 현재 전국 150여개) (<http://www.familynet.or.kr>)

# 1.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배경

## 1) 건강가정기본법의 배경

### ▶ 한국 가족의 변화

가족의미의  
변화

- 개인 선택권 증가, 결혼과 이혼,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

가족형태의  
다양성  
증가

- 부부가족, 한 부모가족, 재혼가족, 국제결혼가족, 조손가구, 기러기가족, 여성연상커플, 주말부부, 생계부양자인 아내와 가사전담자인 남편가구, 1인 가구 등

가족의 돌봄  
기능 약화

- 맞벌이 가구 및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돌봄 노동의 수요가 증가
- 가족원의 감소와 가족안정성의 약화 등 가족 내 돌봄기능의 약화 초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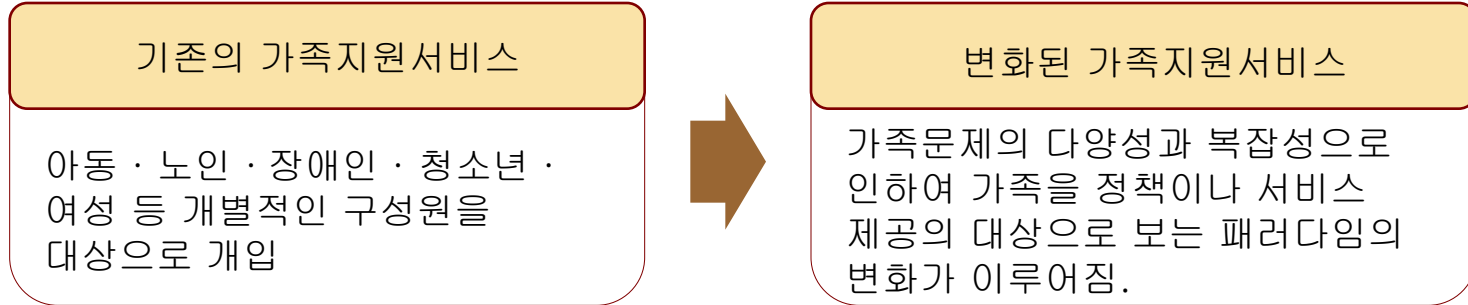
평등한  
가족문화에  
대한 요구 증가

- 기성의 가부장적 가족관계와 의례에 대한 변화 욕구 증가, 가족 내 가사 및 돌봄 노동의 분담요구 증대

# 1.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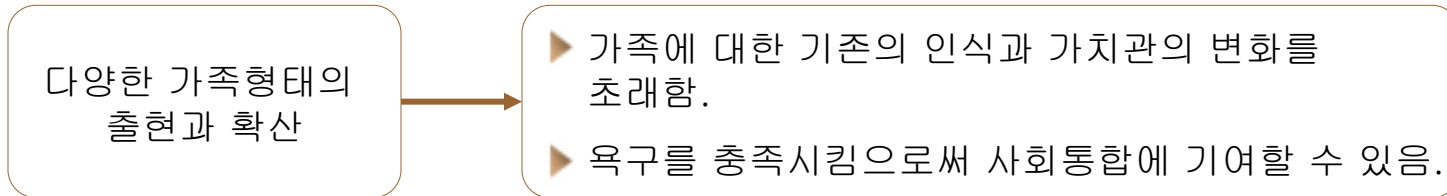
## 1) 건강가정기본법의 배경

### ▶ 가족단위의 통합적 지원의 필요성



### ▶ 가족문제에 대한 사전적·예방적 접근의 필요성

-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개입 : 보호 가족에 집중되었으며, 사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짐.
- 가족문제에 대한 예방적 차원 : 제도를 통해 구현함으로써, 가족문제의 예방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.



- 가족실태조사와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통하여 가족정책에 대한 장기적 발전을 제시할 수 있음.

# 1.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배경

## 2)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- 건강가정기본법(법률 제7166호)

### ▶ 제정이유

- ▶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·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함.
- ▶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함.
- ▶ 가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건강가정을 구현함.
- ▶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.

### ▶ 시행일

- ▶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. (공포일 2004년 02월 09일)

# 1.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배경

## 2)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- 건강가정기본법(법률 제7166호)

### ➔ 주요내용

1

장기·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. (법 제12조)

2

건강가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. (법 제13조)

3

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. (법 제15조 내지 제17조)

4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,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. (법 제20조)

5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 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하고,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, 재산, 정서 등의 제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. (법 제31조)

## 2.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

‘개인-가족-사회’의  
병행 발전 도모

- 개인을 가족과 사회라는 보다 확대된 체계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봄.
- 건강한 가정이 개인과 사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음을 명시

국가의 적극적  
가족정책

-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정책에 대한 소극성을 극복함.
- 보다 적극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개입과 책임을 중시함.

양성평등에 기초한  
가족관계 강조

- 가부장적 가치관을 지양하고 민주적이며,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관계를 강조
- 다양한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사회가 보다 양성평등적인 가족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전제하고 있음.

가족단위의 종합적  
정책 추진

- 가족단위의 복지증진을 강조함.
- 모든 사회정책에 있어서 가족단위의 종합적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함.

## 2.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

건강가정사업의  
효율성 증대를  
위한 전달체계 강화

- ‘건강가정지원센터’를 통해 전달체계를 확보하고 있음.

출산의 사회적  
가치증대

- 건강가정기본법은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.

사회적 일자리  
창출에 기여

- 중앙,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건강가정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건강가정사는 사회복지학, 가정학, 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구성됨.
- 부양부담이 있는 가정의 가족부양을 지원하고, 가사·육아·산후조리·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

# 3.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논의

## ▶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논의 1

가족

- ▶ 혼인 · 혈연 ·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명시하고 있음.
- ▶ 혼인, 혈연, 입양 뿐만 아니라 공동체,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관계적 개념으로 정의함.
- ▶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.  
⇒ 특정한 가족형태를 건강한 가족으로 전제하고 있지는 않은가?

### ■ 법안 명칭인 ‘건강가정’

- ▶ 우리 가족을 이분법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, 이미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유형을 정책 대상에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정책을 총괄하는 기본법으로서 부적절한 명칭

### ■ 1인 단독가구

- ▶ 농촌지역을 고려할 때 사실상 존재하는 가족인데, 이를 삭제할 경우 수많은 노인 단독가구들이 가족정책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.

# 3.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논의

## ▶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논의 2

- ▶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함.
- ▶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가정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.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.
- ▶ 여성가족부와 업무조정이 요청되고 있음.  
⇒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업무의 이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, 여성가족부의 주관하에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함.

법 개정이 지연

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은 가족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.

# 3.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논의

## ▶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논의 3

- ▶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에서 직장과의 양립이라는 사항을 각호로 규정하고 있음.
- ▶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족구성원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.
- ▶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화할 필요가 있음.

건강가정기본법

여성의 모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 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.

### 3.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논의

- ▶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가족해체라는 말을 법조문에 명시해 특정한 가족유형에서 벗어난 가족들은 온전함이 깨어진 불완전한 것으로 암시하고 있다는 점
- ▶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선언, 다양한 삶의 방식 선택을 차별한다는 점
- ▶ 가족변화(문제)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가족 밖 원인과의 관련성을 간과한 채 가족 안에서만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점 등을 비판함.
- ▶ 건강가정 생활문화부분에서 가족단위의 자원봉사를 거론하는 등 중산층 중심의 사고방식과, 관련교과목 이수와 관련학과 졸업 등으로 양성되는 전문가(건강가정사)의 지원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도 비판의 대상이 됨.